

동북아중심국가와 제주국제자유도시

양길현*

목차

- I. 머리말
- II. 21세기 동북아 신질서와 한국의 동북아중심
- III.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동북아지향
- IV. 결론

I. 머리말

2003년 노무현정부가 출범했다. 신정부는 참여정부의 기치 하에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과 평화번영의 동북아를 지향하고 있다. 2003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노무현대통령은 동북아중심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평화번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동북아시대의 두 축으로 '번영의 공동체'와 '평화의 공동체'를 설정하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동북아경제중심국가'를 주창하였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역동성과 위상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세계 전체 총생산과 대비할 때 동북아지역의 비중은 2000년 21%이고 2020년에는 30%로 증가할 전망을 낳고 있다. 이렇게 동북아의 위상이 큰 만큼이나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은 지금까지보다 더 한층 강화된 한국의 정치·경제적 역량을 요청하게 된다. 결국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이란 21세기 한국이 나아갈 미래비전을 위해 국내·외적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재정립해 나가고, 특히 제도개선과 인력양성 그리고 개혁과 통합을 통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

한 한국 사회의 건강한 힘을 바탕으로 하여 동북아의 주도적 국가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을 뜻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역시 이와 같은 동북아중심과 평화번영의 동북아와 긴밀히 연결되면서 추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신정부의 동북아중심국가론과 관련하여서는 그것이 미래지향적 목표설정의 꿈으로서 그리고 “새로운 공간으로 민족적 시간이 부채살처럼 뻗어나가는 꿈”(김명섭 2003, 30)이라는 측면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이면서도 ‘왜 동북아인가’와 ‘중심이 가능한가’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미래를 ‘왜 동북아 틀에 가두고 있는가’라는 문제제기와 함께 김명섭(2003, 30)은 “진정으로 민족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은 동북아와 동남아, 아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다 큰 그림으로 나서자는 논의와는 정반대로 김재홍(2003, 11)은 동북아중심국가 건설에 소요되는 엄청난 투자 재원을 고려할 때 ‘동북아 교량국가’가 보다 실현가능성이 높으며, 또 국제정치에서는 “대등한 국가관계가 원칙”이고 중심-주변은 공식 용어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동북아의 중심에 선다기보다는 다리가 되어 종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전략이 아냐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신정부의 동북아중심국가론에 대해 양쪽에서의 보완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결국 21세기 동북아 경제권의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둘 때 한국의 새로운 선택에는 기회와 제약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산업화 모델이었던 일본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아직도 심기일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게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지만 동시에 일본의 탄탄한 최첨단기술을 염두에 둘 때 일본을 따라잡는 것 못지 않게 일본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전략산업분야를 선택·집중하여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거대한 인구와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통해 한국을 위협하고 있지만 중국보다는 비교우위에 있는 기술력과 인적자원의 질을 통해 차제에 중국과 서구를 연결 짓는 물류기지로써 도약하면서 첨단지식정보산업의 기반 강화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는 기회유인을 한국에 제시해 주고 있다. 물론 한국은 여전히 북핵 위기와 같은 국제정치적 불안정과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노정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지만, 그래도 “고급두뇌와 창의력, 세계일류의 정보화 기반.....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과 고속철도 등 하늘

과 바다와 땅의 물류기반도 구비"하고 있어서 "동북아의 물류와 금융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 노무현대통령의 취임사 메시지다.

탈냉전 이후 더욱 압박을 가해 오고 있는 세계시장에서의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에 대응하여 각 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자본주의의 지구화와 이에 대응한 국가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노무현정부의 동북아중심이란 21세기 모든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탈냉전의 세계화(globalization)에 대한 한국적 응전에 해당한다. 다만 동북아중심에서 국가의 역할은 비교열위에 대한 보호라든가. 동원체제의 정비를 통해서가 아니라 대외개방과 제도개혁 그리고 인력 및 물리적 환경의 개선을 토대로 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전향성을 보이고 있다¹⁾. 특히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의 다른 모든 곳과 함께 보다 풍요롭게 살아가는 공동의 '평화번영'을 추구함에 있어 평화 없이 번영이 불가능하지만 또한 번영 없이는 평화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 논문은 탈냉전과 세계화의 흐름 그리고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동북아중심국가 건설의 의미와 과제 그리고 그와 관련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가능한 역할과 영역을 점검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 논문이 동북아중심국가 건설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간의 상호 연관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세계화에 의해 촉진된 지방시대의 개막이 민주적 분권화와 정치·행정의 현장화 그리고 지방도시와 넓은 세계와의 교류"(안병영 2000. 31)를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II. 21세기 동북아 신질서와 한국의 동북아중심

(1) 탈냉전-세계화 속의 21세기 동북아 신질서

1989년 12월 미소간의 몰타회담 이후 공식화된 냉전체제의 종식은 동구의 민

1) 이와 관련하여 경쟁력 강화책이 외자유치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전 지구적으로 유연하게 활동하는 초국적 기업들에게 보다 유리한 가치증식 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경쟁"(구춘권 2002. 22)으로 집중되는 것은 문제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주화, 독일의 통일, 구소련의 해체, 걸프전 등을 거치면서 이른바 '신국제질서'를 태동시켰다. 여기서 의미하는 신국제질서란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여타의 강대국들이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는 단극다중심체제(unipolycentrism)를 뜻한다. 최근에는 이라크 공격을 둘러싸고 '지배국'으로서의 미국의 패권적 독주에 대한 강대국으로서의 중국과 러시아, 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견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중 그 어느 나라도 단독으로는 정치·경제·군사·문화의 모든 면에서 종합적으로 미국의 지배국적 위치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갖춘 나라는 없다. 그 결과 신국제질서는 과거 이데올로기적 정향을 강조하고 군사적 능력을 토대로 국가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국제정치군사적 사고로부터 벗어나 미국의 세계경찰 역할을 통해 안정화되어 있는 자본주의 세계시장에서 경제적 상호의존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국제정치경제적 사고로의 전환을 담고 있다.

탈냉전과 더불어 더욱 강하게 불어 닥친 세계화 물결은 20세기와는 다른 형태의 인식과 전략의 전환을 추동시키고 있다. 여기서 세계화란 기존의 영토적·지정학적/경제적·갈등-경쟁적·제국주의적 상호작용양식으로부터 탈영토화/재영토화적·지경제적·협력-경쟁적·탈제국적 상호작용양식으로 전환해 나가는 세계사적 흐름을 지칭한다고 볼 것이다.(헬드 외 2002, 131, 요약 1.2 참조) 이는 전 세계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지구적 상호연결성을 확장·심화·가속"(헬드 외 2002, 35)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세계 자본주의의 역동성이 시장을 매개로 한 대외 개방·경쟁·교류의 증진을 요구하는 만큼이나 탈냉전의 경제적 효과는 곧 탈영토적 시장을 매개로 하는 자본주의의 전 지구적 확대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세계화는 영토와 갈등 그리고 제국주의의 시대에 한반도를 포함하여 아시아 국가들에 강요되었던 '수난의 역사'를 청산하고 탈영토와 협력 그리고 탈제국적 시대를 맞이하여 상호협력과 공동시장 그리고 자유무역의 시대를 열어가도록 촉구하고 있다. 여기서 이와 같은 공동번영의 가능성은 세계화의 '시공압축'을 통해서 갈통의 지적처럼 "세계는 모든 곳이 중심이고 어떠한 곳도 주변이 아닌"(갈통 2000, 30) 것으로 세계를 바꾸어 나가고 있는 21세기적 전환으로부터 시작한다.

탈냉전과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조성된 21세기 신국제질서는 동북아에서도 다음과 같이 3가지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동북아 신질서는 탈냉전-세계

화로 인해 미-소간의 군사적-이데올로기적 대결은 종식되었지만 그렇다고 경제력만이 동북아 국제관계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다. 여전히 군사력은 동북아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역할하고 있다. 다만 냉전시대에 비해 경제력 내지는 경제적 이익의 비중이 군사력 보다 더 중요하게 동북아 국제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²⁾. 둘째, 탈냉전은 미소간 대결의 종식을 통해 미국 우위의 질서로 재편을 가져왔지만, 그러면서도 동북아에서는 미국의 독주를 막으려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들의 능력은 여전히 견재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유럽에서의 동서 블록간 경쟁과 갈등은 해소되었지만, 동북아에서는 특히 미국과 중국간의 눈에 보이지 않은 잠재적 대결이 존재하고 있다. 셋째, 일방적인 군사력 동원이 크게 제약받게 되는 탈냉전-세계화의 흐름 속에서는 영토의 확장이나 정치적 종속관계를 통한 국익 추구 비용이 무역을 통한 국익 추구 비용을 훨씬 상회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 국가들 모두 세계시장에서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지역경제통합³⁾과 함께 “세계화에 수반하는 균열의 위험을 제어할 전 지구적 차원의 정치적 협력체제를 구축”(구춘권 2002, 24)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탈냉전과 세계화의 시대에 동북아 신질서의 변모는 과거와는 분명 다르다. 즉, 지난 10여년간의 동북아시아를 보면 “미국-일본-중국-러시아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익의 쟁점에 따라 견제와 협력이라는 상반된 양상이 표출”(안승국 1999, 25)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9년 이전 냉전시기의 동북아시아 질서와 비교할 때 탈냉전-세계화 시대 동북아시아 신질서는 미국 헤게모니하에서 다강대국간의 협조적 성향을 더 강하게 띠고 있다는 데에서 중요한 하나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즉, 과거와는 달리 특히 1989년 이후 재정립된 동북아시아의 단극다중심체제 역시 갈등과 대립을 우선 축으로 하는 견제·도전보다는 교류와 상호의존을 증시하는 공존·협력의 정향을 더 강하게 띠고 있다는

2) 이를 두고 필러(1999, 67-69)는 세력균형을 증시하는 권력국가에 대비되는 것으로서 국제 협력을 강조하는 교역국가의 대두에 주목하고 있다.

3) 동북아에서는 한-중-일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미 2000년에 인도를 비롯한 일곱 나라가 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나섰는가 하면 2003년 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어 아시아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고 2005년에 남북아메리카 34개 나라를 중심으로 미주자유무역지대가 출범하게 된다.(김태보 2003, 62-63)

데서 21세기 동북아시아 신질서의 새로운 면모이자 탈냉전이라 지칭되는 변화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2) 한국의 동북아중심

탈냉전·세계화의 협조적 정향이라는 단극다중심적 동북아 신질서 속에서 노무현정부의 동북아중심국가 건설은 어떤 의미를 갖으며 향후 어떤 양상을 띠며 전개될 나갈 것인가?

첫째로, 동북아시아에서 단극으로 규정되는 세력의 불균형이란 미국이 지배국으로서의 패권적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미국이 군사적으로 최강국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자유무역의 세계경제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 한국, 심지어는 북한⁴⁾까지도 자유무역의 세계경제에서 이탈하거나 고립될 때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세계시장의 역동성과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이처럼 탈냉전·세계화라는 이름하에 국제질서가 경제관계를 중심축으로 전개되어 나감에 따라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지배적 위치와 역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야말로 21세기 동북아시아 신질서에서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미국에 대해 협조적 정향을 띠도록 하는 기본적인 동인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미국 주도의 동북아 질서가 앞으로 최소한 20년 정도는 지속되리라 보는 한, 전통적으로 한미관계가 한국의 안보와 경제성장의 주춧돌로 작동해 온 관행만큼이나 신정부의 동북아중심국가론도 50년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진행되어 나가리라 본다. 취임사에서 노무현대통령이 “우리의 안전보장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던...한미동맹을 소중히 발전시켜 나갈 것”(『조선일보』, 2003년 2월 26일, 8면)이라는 의사를 밝힌 것이 그것이다. 물론 노무현대통령은 북핵위기를 둘러싼 부시행정부의 강경노선에 대해 이를 한국민의 입장에서는 “생사의 문제”인 것으로 문제제기하면서 미국에게 “지나친 모험을 삼가”(『조선일보』, 2003년 2월 25일, 2면)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고, 또 여중생사

4) 북한이 안보상의 위협 못지 않게 경제적 생존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미국으로부터의 생존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고 모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망추모 촛불시위에서 나타났듯이 미국과의 호혜 평등한 관계를 요구하는 한국 민들의 정서에 부응하는 자주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대미수출시장의 매력과 한미동맹을 통한 한국사회의 안정화 등 현실의 정치·경제적 필요로 인해 노무현정부가 대미관계에서 파격적인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본다면 노무현정부의 동북아중심국가 건설은 앞으로는 한편으로는 대등한 한미관계를 의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지배적 역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국제정치경제의 현실 속에서 양면적인 한미관계 전략을 추진해 나가리라 예상된다.

둘째, 부시행정부의 등장 이후 미국의 MD 추진과 이라크전 감행을 둘러싸고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⁵⁾ 등 유럽과 동북아시아 강대국들의 다극적 선호와 반패권적 정향은 미국의 오만과 자국 중심적 정향에 대한 풀뿌리 시민들의 반발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어 나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동북아 신질서에서 향후 미국에 대한 견제가 유효할 수 있는 토대는 일본과 중국 등 동북아권의 경제력과 군사력 증진에 있다. 특히 지난 10년에 이어 향후 10년도 연평균 7% 이상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지속하리라 여겨지는 중국의 부상은 동북아의 역학관계를 재조명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2003년 2월 27일 중국과학원이 공개한 <2003년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보고>에 따르면, 중국의 종합국력은 세계 7위이지만, 경제력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3위이고, 군사력은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4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조선일보, 2003년 3월 1일, 13면〕

여전히 세계 2위 경제강국인 일본의 경제력과 급격히 부상 중에 있는 경제대국인 중국 그리고 경제중진국으로서 일본과 중국을 잇는 한국의 잠재력에 주목하여 다양한 형태의 동북아 경제공동체가 제안되고 추진 중에 있는데, 한국의 동북아중심도 바로 이러한 역동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중·일 동북아의 경제적 역동성에 주목하면서 미·중·유럽연합과 함께 동북아시아가 세계 3대 시장이자 성장축을 형성하여 나가는 일련의 흐름을 반영하면서 노무현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근대 이후 세계의 변방에 머물던 동북아”가 이제는

5) 1991년 걸프전 당시 130억달러를 부담했던 일본도 이번에는 “재정사정 악화와 이라크전쟁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정세를 감안해” 전비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미국에 전달한 바 있다.〔한겨레, 2003년 2월 28일, 8면〕

“세계의 5분의 1”의 경제규모이고 “유럽연합의 4배가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서 “세계경제의 새로운 활력으로 떠올랐”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렇게 한·중·일의 경제력을 토대로 한 교류·협력의 유용성과 관련하여 세계은행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동아시아 통합-성장공유를 위한 무역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이 이루게 되면 향후 10년 내에 역내 국가들이 연간 총 300억달러, 또는 GNP 10% 가량의 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추산”하면서 한국도 경제성장률이 1% 올라가는 이익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조선일보』, 2003년 6월 9일, B4) 이와 같은 경제통합의 일환으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역사·군사·외교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쉽게 성사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2003년 10월 한·중·일 정상회담이 만나 안보는 물론 무역 및 투자, 역내 금융안정 등 경제부문 이외에도 환경보호, 인적교류 등 14개 사항의 합의를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동북아 공동체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딛기도 했다.(『대한매일』, 2003년 10월 8일, 4면)

셋째, 2003년 현재 동북아시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강대국간 협조체계 속에서 유례없는 안정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이는 1989년 이후 전 세계가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틀 속에서 상호의존의 통합과 경쟁을 벌여나감에 따라 동북아시아 각 국가들도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시장의 파고에 순응하기 위해서 각 국가들간에 쌍무적 혹은 다자간 협조를 추구해 나가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경제적 개혁·개방의 추세는, 이것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경제·사회적 다원주의를 통해 정치적 다원주의까지도 가져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각각의 입장에 따라 기대와 우려를 낳고 있기는 하지만, 각 국의 긴급한 국내경제적 필요로 인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노무현정부의 동북아중심국가 건설 역시 이러한 경제적 상호의존의 확대·심화 추세와 대외개방의 필요라는 “경제적 범세계화의 엄연한 현실”(기든스 1998, 70)에 부응하여 일차적으로는 “EU와 같은 지역통합과 지역공존의 질서”(청와대소식 2003, 1)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역점을 둔 것으로 파악된다.

넷째, 경제적 상호의존과 세계시장에서의 협력적 경쟁이 동북아시아 각국의 대외관계를 규정짓는 일차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안보적 차원에서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상호간의 우려와 의혹을 해소하지 못

한 채 냉전시대의 쌍무적 협력관계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고 있다. 한·미·일 간의 안보협조체제는 그대로 변함없이 작동하고 있는가 하면 중러와 북중 그리고 북러간의 관계도 과거와 같은 정도의 혈맹관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호-협조적 안보관계를 그대로 지속시키고 있다. 물론 이러한 안보관계는 냉전 시대와는 달리 유사시의 대비와 억지라는 보다 소극적 차원의 방어적 성향을 더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처럼 동북아시아 각 국가들간에 쌍무적인 안보관계가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상태가 아직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다른 측면에서 보면 동북아시아에 있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간 협력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가운데 각국이 저마다 자구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⁶⁾.

이렇게 볼 때 노무현정부의 동북아중심국가 건설은 경제적 상호의존의 확대로 인한 정치적 파급효과 속에서 변모와 진전을 보이는 동시에 안보상의 우려와 고려 때문에 그러한 진전이 어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진전되어 나가는 것은 제약을 받게 되는 두 축을 오가리라 본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둔 듯 노무현정부의 동북아중심국가론은 “확고한 경제중심 역할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이 동북아 시대 개척의 선결과제”(청와대소식 2003, 1)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동북아중심은 “경제에서 출발”하여 “동북아에 ‘번영의 공동체’를 이룩하고 이를 통해 세계의 번영에 기여”하는 사명을 띠게 되는데, 이러한 가능성의 민족적 논리와 기반은, 우정은(2003, 22-26)의 지적처럼, 한편으로는 남북한 화해·평화·통합과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 시민사회의 민주·활력·평화로 요약될 수 있다.

6) 탈냉전 이후 동북아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필요성이 널리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다자안보협력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 이서항은 1) 공동안보의식의 결여, 2) 정치·경제·문화·역사적 구조의 다양성, 3) 동북아시아의 국내정치적 취약성, 4) 지역정체성의 부족과 다자주의 전통의 결여, 5) 역내 국가들의 상이한 안보전략 추구 등을 들고 있는데, (이서항 1998, 323-330) 필자 보건의대 가장 결정적인 제약 요인은 다자간 안보협력체에 대한 미국의 반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Ⅲ.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동북아지향⁷⁾

제주도는 16개 시·도의 하나로 보면 인구 55만의 작은 섬에 불과하다. 규모와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제주도는 전문화된 생산요소가 부족하고 시장의 지리적 인접성이 제약되어 있는가 하면 관련 산업간의 밀접한 연계성도 부재하기 때문에 제조업 기반의 산업을 진흥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다만 한반도의 부속도서라는 일국적 시각을 벗어나서 동북아로 눈을 돌리게 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제주도의 지정학과 지정경제적 위치 그리고 제주도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청정환경 및 특히 탈한반도라는 섬 지역적 특성⁸⁾을 활용하여 제주도를 동북아 교류협력의 거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비전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 지정경제적 특성을 토대로 한국의 동북아중심 시대를 열어 나가는 국가발전 전략 가운데 하나로서 제시·추진되고 있는 것이 제주국제자유도시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1) 제주 지역과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⁹⁾ 2) 외국인투자자유치를 위한 전초기지로 삼기 위해 3) 각종 규제완화와 함께 다양한 세제혜택과 재정적 지원, 교육 등 편의 제공을 통해 4) 관광·휴양과 이에 수반하여 환경친화적인 금융·물류·교육 등 고부가가치산업의 비즈니스가 잘 조화된 21세기형 복합다기능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려고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기본적 특성은 제주도의 탈영토적 동북아 지향을 뜻한다. 이렇게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동북아지향은 참여정부의 동북아중심국가 건설과 연결되는 매개 고리로서 의미가 크다.

참여정부의 동북아중심국가론에서 제주도는 용유·무의와 함께 아시아의 대

-
- 7)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동북아지향은 동북아중심보다는 목표의 합리성과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둔 '교량적 역할'에 강조를 두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노무현정부의 동북아중심국가를 '동북아 교량국가'로 낮추자는 김재홍(2003, 11)교수의 입장과 동일한 선상에 있다.
- 8) 제주도는 독자적인 지방자치단체로 존립하면서도 인구가 55만밖에 안되고 경제규모도 적은 데다가 한반도로부터 141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섬 지역이기 때문에 차별적인 제도의 적용이 비교적 용이하다. 2003년 10월 제주도민과의 대화에서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육성하겠다는 노무현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제주도의 고유한 특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다.
- 9) 특히 제주경제 성장률은 감갈 경쟁력 약화로 인해 1996-2002년간 7.2%의 한국경제 평균보다 낮은 5.3%에 머물고 있어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시급한 실정이다.(Kang Gichoon 2004, 4)

표적 관광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제주도의 관광산업은 “지역 자체가 유일한 공급원이며 동시에 독점적 지위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제주) 지역을 방문해야 만이 소비할 수 있는 산업”(김택권 2003, 148)으로서 발전되어 왔고 앞으로도 비교우위적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⁰⁾. 즉, 제주도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한라산·오름·해변·삼림 등 천혜의 자연환경.....역사문화 자원, 다양한 관광레저 및 휴양시설들”(정종환 2002, 23-24)에서의 비교우위를 통해 제주도를 아시아의 대표적 관광지로 계속 육성해 나가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복합다기능의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하여 제주도의 관광산업이 갖는 특성적 함의는 관광산업이 복합산업이라는 데서부터 나온다. 다시 말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중점을 두는 관광산업에는 “좁은 의미의 관광은 물론 휴양, 회의, 학술, 스포츠 및 교육 등이 포함”(김세원 2002, 11)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복합산업으로서 관광산업의 특성은 “환경과 문화, 금융, 비즈니스, 정보인프라 등이 관광이라는 우산을 이루는 우산살에 해당”된다는 송재호교수의 주장과 같은 맥락의 것이며, 결국 국제자유도시란 바로 이러한 ‘관광우산’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해된다.(제주발전연구원 2002, 29)

이렇게 볼 때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정체성은 무엇보다도 제주국제관광도시로부터 시작한다¹¹⁾. 제주도를 아시아의 대표적 관광도시로 육성해 나가려고 한다면, 관광의 “종합예술품적 성격과.....장치산업적 속성”(송재호 2001, 99)으로 인해 공항, 항만, 정보통신, 금융 등과 같은 인프라는 물론이고 교육, 환경, 문화, 다양한 형태의 삶의 질이 앞서거나 뒷서거나 하면서 병행·추진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2002년 4월부터 시행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제주도를 아시아의 대표적 국제관광지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 공항, 항만, 도로, 상·하수도, 초고속통신망 등 사회기반시설에 2010년까지 2조 9천여억원을 투자하

10) 김택권은 제주도의 특성에 조응하는 비교우위 가능산업으로서 관광산업 이외에도 “신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연구개발업, 독창적인 영화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하는 콘텐츠 개발업 그리고 교육산업”(김택권 2003, 148)을 제시하면서, 특히 제주 국제교육 복합단지를 통한 교육산업에서의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특화를 제안하고 있다.

11) 강기춘교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중단기적으로는 국제관광위락도시로 전문화 (specialization) 해야 하면 다만 장기적으로는 금융·물류·비즈니스 등으로 다원화(diversification)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Kang Gichoon 2004, 15)

는가 하면, 7대 선도프로젝트¹²⁾와 4대 촉진프로젝트¹³⁾를 선정하여 총 1조 7,345억을 집중 투자하고자 하고 있다.(좌승희 2003, 6)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노비자 등 출입국간소화, 언어소통의 자유화, 내국인 면세점, 골프장 세금감면, 휴양펜션업 활성화, 투자진흥지구제도, 자유무역지역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도, 교육특례제도, 선박등록특구제도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에 덧붙여 복합기능화와 첨단산업의 접목으로서 국제회의산업, 평화산업 등을 추진하고 나아가 미래의 씨앗창출산업으로서 IT와 BT, 국제물류기지 또는 역외금융센터의 도입¹⁴⁾ 등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제주발전연구원 2002, 22-39)

참여정부가 동북아경제중심을 여는 다양한 정책과 노력을 경주하는 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동북아지향이야말로 신정부의 동북아중심국가론을 이끌어 가는 인천-송도와 함께 전초기지이자 주요 영역을 구성하여 나가리라 본다. 동북아중심국가 건설이 “비즈니스 거점개발지역과 각 지방의 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를 통해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청와대소식 2003, 1)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더욱 유용한 활력이자 모델로서 의미를 갖는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의 밝은 면을 본다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출범한 지 2년이 되는 시점에서 무사증입국 등 출입국 간소화, 2002년 12월 25일 공항과 항만 등 3곳의 내국인 면세점 개장¹⁵⁾, 2002년 4월 20일 이후 골프장 입장료 인하¹⁶⁾, 휴양펜션업 활성화, 교육특례제도 도입, 선박특구등록제도의 도입¹⁷⁾,

12) 휴양형주거단지, 중문관광단지, 서귀포관광미항, 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공항자유무역지역, 쇼핑아울렛, 생태·신화·역사공원 등 7대 선도프로젝트의 추진현황과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고부언 2003 참조.

13) 7대 선도 프로젝트에 이어 추가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계획·추진하고 있는 4대 촉진프로젝트란 건강미용테마타운, 국제문화위락단지, 해양관광단지, 레포트단지를 말한다.

14)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하여 제주국제금융센터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으로는 강철준 1999, 15-23 참조.

15) 내국인 면세점 개장 이후 2003년 1월-2월 2달 동안 이용객수는 “20만명이 넘어섰고 매출액도 150억원을 돌파했으며...연간 163명이 입장해 1100억원 매출에 200억원 정도의 순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제주도내 토산품 상권의 “1월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50%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대한매일』, 2003년 3월 6일, 19면)

16) 2002년 4월 이후 골프장 그린피가 3만원 가량 인하되면서 2002년 “골프장 이용수는 내외국인 합해 47만 3627명으로 전년 대비 24% 늘었다. 반면 외국인은 7만 1253명으로 전년 대비 5000여명 감소해 ‘안방잔치’에 그치고 있다.”(『대한매일』, 2003년 3월 6일, 19면)

17) 선박등록특구 지정을 통해 2002년 12월 17일 현재 371척의 국제선박이 제주도에 등록되

2003년 3월 컨벤션센터 준공 등 관광진흥 차원에서의 특례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고무적이다.

이렇게 제주국제자유도시가 한국의 동북아중심을 열어나가는 일익 담당자로서 역할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동북아중심국가 건설과 연결시키려는 중앙정부의 특례지원이 미진하다. 특히 2011년까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소요되는 총 31조 5,445억원 가운데 국비가 7조 5,828여억원이고 지방비가 4조 2,889여억원이며 민자포함 기타가 19조 994여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20조에 가까운 민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자유도시 특유의 제도와 유인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김여선 2002, 84) 또한 외국인자본의 유치 못지않게 제주도내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촉진자로서의 사회투자나 정보 및 교육훈련의 제공이 미약하고, 또 제주도내 감귤 등 1차산업의 생존을 포함하여 기존산업과 대안산업 간에 균형을 도모하는 구조연계정책이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¹⁸⁾. 더욱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언명에 있어서는 사람-상품-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표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람-상품-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중앙정부의 불안 내지는 확산결여로 인해 제주국제자유도시를 향한 획기적인 조치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Kang Cheoljoon 2004)

물론 동북아중심국가론에서 전략산업으로 거론되는 관광과 관련해서는 이미 2년전에 출범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선점적 위치와 기존의 잘 갖추어진 관광 인프라는 중요한 경쟁력을 구성하고 있다. 용유·무의의 개발구상을 보면 2007년까지 115만평의 엘리스랜드: 위락형리조트를 건설하고 이어 2012년까지 53만평의 마린월드: 복합해변친수공간과 45만평의 드래곤시티: 국제적 리조트타운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허동훈·이왕기 2003, 34) 그러나 이 구상은 "우선협상대상자의 재원조달계획 미비로 인해 원점에서 개발방안을 다시 모색하는 단계"(허동훈·이왕기 2003, 35)에 있다. 이에 비해 제주국제자유도시는 7대 선도프로젝트 용역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미국과 홍콩 등 4개기업과

어 있다.(최승희 2003, 7)

18) 제주농업의 미래와 관련하여 김태보(2003, 72)는 전업농의 육성 및 법인화, 청정농산물 생산지대의 조성, 유기농산물 생산체계의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강경선(2003, 112-114)은 친환경농업과 같은 '질의 경쟁'과 장수식품과 같은 기능성농작물 그리고 관광농업을 통한 특화를 제시하고 있다.

생태·신화·역사공원에 들어설 테마파크에 10억달러(1조 2000억원), 첨단과학기술단지 4억달러(4800억원), 공항자유무역지역 2억 5000만달러(3000억원)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또 관광개발 분야에 개발사업예정자로 지정되거나 신청한 업체는 모두 8곳으로 9500억원에 이른다”(『대한매일』, 2003년 3월 6일, 19면) 다만 한국관광공사가 분양중인 중문관광단지 내의 15만평 부지에 대한 시설투자를 위해서 미국 SCI와 25억달러(3조원)의 협상이 추진되다가 무산된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어떻든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용유·무의의 경쟁에 앞서서 아시아의 대표적 관광지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와 외자유치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향후 인천-송도 중심으로 동북아 IT허브가 진전되어 나갈수록 용유·무의와 함께 상호 유기적 연관을 통해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발전시켜 나가는 지혜와 전략이 요청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대외적 경쟁력은 작게는 제주지역 그리고 넓게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 개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동북아 지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동북아시아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바의 독특한 동아시아적 위상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주문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전환과 보다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동북아지향이 성공을 거두려면 외국인을 중심으로 민자유치를 유인하는 획기적인 제도개선과 중앙정부의 특례적 지원 못지않게 궁극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함께 그것이 제주사회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가능성에 의존한다. '왜 제주국제자유도시인가'에 대한 한국민들의 이해와 요청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국가전략사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통해 1) 한국의 동북아시대를 여는 데, 2) 한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데, 그리고 3)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만큼, 예를 들어 경제특별구역 운영 및 지정에 관한 법률(경제특구법)의 특례조항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도 쉽게 원용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제주사회 스스로 내부적 혁신과 자구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그에 수반하여 먼저 시범의 차원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정부의 특례지원이 요청되어야 할 것이다¹⁹⁾.

2003년 2월 제주도민토론회에서 노무현대통령은 제주도를 분권화의 시범도로

특별 대우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고²⁰⁾, 2003년 10월 31일에는 제주 4·3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를 언명하는 자리에서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육성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여기서 특별자치도란 단순히 지방자치의 자율성 강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동북아중심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이를 선도하는 지방의 역할 증대를 포함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 하에 동북아지역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위한 시범의 차원에서 일본 오키나와와 홍콩특별행정구 그리고 북한 신의주특구와 같은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갖추면서 이들 도시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동북아 지역 협력의 거점도시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분권화 역할은 지역경제협력에 덧붙여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의 한 영역을 담당할 수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52조에 규정된 '세계 평화의 섬'은 제주도의 특별한 역할과 위상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동북아시아의 자유로운 관광·무역·금융도시로 탈바꿈해 나감에 따라 제주도는 불가피하게 남북한·중·일 모두로부터 체제를 넘어선 탈영토적 자유평화지대로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평화의 섬 제주는 지구화의 지구적 상호연결성과 경제적 탈영토화에 부응하고 또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진전과 긴밀히 연결되면서 동북아의 분쟁조정과 경제공동체의 가능성을 증대시켜 나가는 국가간-도시간 대화-교류채널이자 다자회의의장소²¹⁾로서의 미래지향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이렇게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노무현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바대로 "진정한 동북아시대를 열자면 먼저 한반도에 평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야 하며.....한반도가 21세기에는 세계를 향해 평화를 발산하는 평화지대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동북아중심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

-
- 19) 물론 정부의 특례지원과 관련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론이 내부적인 개혁의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독점지향적이고 중앙의존적인 특혜를 얻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에서 제기되었던 것은 아닌지 반성"(고호성 2003, 291-292)할 필요가 있다.
- 20) 시범도는 잘되면 모범도로서 선점의 이득을 보게 되지만 잘 못되면 정책의 실험실로 전략하게 되는 양면성을 띤다.
- 21) 평화의 섬 제주가 동북아의 대화채널이자 다자회의의 장소로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은 1) 남북정상회담 장소로서의 제주도, 2) 2004년 ADB 총회와 같은 국제회의의 지속적인 제주 유치, 3) 제주평화의섬추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제주평화회의의 등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다.

IV. 결론

노무현정부의 동북아중심국가론이 세계화의 도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응전이라고 한다면,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세계화의 도전에 대한 제주도 지방정부의 응전이다. 지구적 상호연결성의 확장·심화·가속이라는 세계사적 흐름과 관련하여 두개의 발전프로젝트는 세계와의 상호연결 및 협력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세계무대에서의 비교우위를 찾아나서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구화의 흐름이 한편으로는 “경쟁의 효율화 기능”(고호성 2003, 260)을 통해서 상호의 존적 자유무역의 상생적 미래를 시사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적자생존의 무한경쟁으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의 불평등 심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양면성을 띠고 있는 데 따른 불가피한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양면성은 동북아경제중심과 제주국제자유도시 두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적 점검과 민주적 감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데, 이 논문은 이러한 비판적 점검에 기여하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동북아중심국가와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비판적 점검의 중간 단계에서 꼭 필요한 작업은 ‘누가 무엇을 위한’ 동북경제중심이고 제주국제자유도시인가의 근원적 문제제기이다. 많은 경우 이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한국민이고 제주도민이어야 하는 것으로 설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예를 들면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하여 지난날 제주도의 관광개발을 압도했던 외생적 개발방식에 대한 수정·보완책으로서 “제주도의 여건과 제주사회의 역동성을 충분히 활용하는.....주민주체의 개발”(이상철 2003, 26-27)이 주창되고 있다. 필자 역시 이러한 주민주체 개발의 당위성을 심분 동감하면서 동시에 제주도민의 “건강하고 튼튼한 정신 인프라”(최병권 2003, 57)가 가장 중요한 근본이라는 최병권의 지적을 상기하고자 한다²²⁾. 즉, “피해의식과 반외세의식, 낯선 사람과 문물에 대한 경계심, 민족문화에 대한 과장된 자부심과 허위의식 및 열등감이 기묘하게 혼합”(최병권 2003, 61)되어 21세기 세계화의 흐름에 어긋나는 자민족 중심적이거나 도민 중심적이어서는 동북아중심이나 제주국제자유도시로의 진입은 어려울 것이다.

22) 제주도민의 건강하고 튼튼한 정신인프라의 확충과 전략으로서 이경주(Lee Kyung-Jou 2004)는 이미지제고전략, 길동해소전략, 제도개선전략, 인적자원양성전략을 제시되고 있다.

동북아중심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외부의 참여가 불가피하고 때로는 요청되기도 하는 것이라면, 주체의 문제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것이 아닌 공동주체로서 개방·협력·연대하는 것일 것이다. 동북아경제중심과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우리의, 우리에게 의한, 우리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세계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어 갖으면서 공존·상생·공영의 것으로 나아갈수록 그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참고문헌

- 갈통, 요한 지음, 강동일 외 옮김. 2000.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서울: 들녘.
- 강경선. 2003. "제주 지역농업의 과거·현재 검토와 전개방향," 제주불교사회문화원 엮음, 『전환기 제주도 지역개발 정책의 성과와 방향』. 제주: 각.
- 강철준. 1999. "국제자유도시와 제주경제 전망," 1999년 9월 제주은행·제주발전연구원 공동주최 〈국제자유도시와 제주경제 발전전략〉 학술세미나에서의 발표 논문.
- 고부연. 2003.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현황 및 향후전략," 2003년 6월 제주발전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 주최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상과 제주의 역할〉 국제학술세미나에서의 발표 논문.
- 고호성. 2003. "세계화 시대의 제주 지역발전전략," 제주불교사회문화원 엮음, 『전환기 제주도 지역개발 정책의 성과와 방향』. 제주: 각.
- 구춘권. 2002. "미국에 대한 테러와 21세기의 세계질서" 『정치비평』. 상반기.
- 기든스, 앤서니 지음, 한상진·박찬욱 옮김. 1998. 『제3의 길』. 서울: 생각의 나무.
- 김세원. 2002. "21세기 제주경제의 미래비전," 『제주발전포럼』. 봄.
- 김명섭. 2003. "왜 동북아 틀에 가두나," 『조선일보』, 2003년 3월 13일.
- 김여선. 2002.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경제특구의 전략 비교," 2002년 11월 제주도의회 교육관광위원회 주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대응방안〉 정책세미나에서의 발표 논문.
- 김재홍. 2003. "동북아 교량국가로 낮추자," 『한겨레』, 3월 12일.
- 김태보. 2003. "제주지역경제정책의 허와 실," 제주불교사회문화원 엮음, 『전환

- 기 제주도 지역개발 정책의 성과와 방향』. 제주: 각.
- 김택권. 2003. "제주 국제교육 복합단지의 역할 모색." 2003년 6월 제주발전연구원 ·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상과 제주의 역할> 국제학술세미나에서의 발표 논문.
- 『대한매일』. 2003년 10월 8일; 2003년 3월 6일.
- 윌러, 하랄트. 1999. 『문명의 공존』. 서울: 푸른숲.
- 송재호. 2001. "제주국제자유도시 제안모델의 적실성 분석." 『동아시아연구논총』. 제12집.
- 안병영. 2000.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안병영 · 임혁백 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서울: 나남출판.
- 안승국. 1999. "동북아시아 동향." 서울대 국제지역원 편, 『아시아 · 태평양 1998-1999』.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우정은. 2003. "한국의 미래를 비추는 3개의 거울." 『창작과비평』. 여름.
- 이상철. 2003. "제주도 지역개발정책의 전개와 성격." 제주불교사회문화원 엮음, 『전환기 제주도 지역개발 정책의 성과와 방향』. 제주: 각.
- 이서향. 1998. "동아시아의 다자안보대화." 이상우 편저, 『21세기 동아시아와 한국 I』. 서울: 오름.
- 정종환. 2002.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과제." 『국제문제』. 9월호.
- 제주발전연구원. 2002. "특집 II 제주국제자유도시, 선점 · 차별화가 가능한가?" 『제주발전포럼』. 여름.
- 『조선일보』. 2003년 6월 9일; 2003년 3월 1일; 2003년 2월 26일; 2003년 2월 25일
- 좌승희. 2003.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평가와 발전방향." 2003년 2월 제주발전연구원과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공동 주최 <우리나라 경제특별구 평가 및 발전전략> 학술세미나에서의 발표 논문.
- 청와대소식. 2003. '참여정부의 국정비전: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http://www.president.go.kr/warp/kr/news/vision/agenda/agendammm-06.html...2003-02-26>
- 최병권. 2003. "정신 인프라가 동북아중심의 요체이다." 『창작과비평』. 여름.
- 『한겨레』. 2003년 2월 28일
- 허동훈 · 이왕기. 2003. "경제특구와 인천경제." 2003년 2월 제주발전연구원과 한

국재정공공경제학회 공동 주최 <우리나라 경제특별구 평가 및 발전전략>
학술세미나에서의 발표 논문.

헬드, 데이비드·앤터니 맥그루·데이비드 골드블라트·조너선 페나턴 지음. 조
효제 옮김. 2002. 『전자구적 전환』. 서울: 창작과비평사.

Kang Cheoljoon 2004. "Comment: The Value of JFIC from the Northeast
Asian Perspective," a paper presented to 37th Annual Meeting of the
Board of Governors Asian Development Bank on May 14, 2004 in Jeju.

Kang Gichoon. 2004. "The Implementing Strategy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s a Business Hub in Northeast Asia," a paper presented to 37th
Annual Meeting of the Board of Governors Asian Development Bank
on May 14, 2004 in Jeju.

Lee Kyung-Jou. 2004. "Comment on The Implementing Strategy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s a Business Hub in Northeast Asia," a paper
presented to 37th Annual Meeting of the Board of Governors Asian
Development Bank on May 14, 2004 in Jeju.